

청년층의 근로빈곤 요인에 관한 연구

-고용불안정과 고용상태가 빈곤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변 금 선

(서울대학교)

[요 약]

높은 청년실업률과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청년층의 경제적 불안이 심화되고 있지만 청년층의 빈곤을 고용의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는 드물다. 특히 청년빈곤이 근로빈곤의 특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이들의 고용불안정과 고용특성이 빈곤의 이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본 논문은 한국복지패널데이터의 제3차(2007년)~제5차(2009년) 자료를 이용해 청년 근로능력자의 빈곤이행(빈곤탈출과 빈곤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용형태와 고용상태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청년층은 빈곤진입 및 탈출이 활발했으며 교육수준이 높고 비취업 상태에 놓인 경우가 많았다. 정규직일수록, 취업상태를 지속할수록 빈곤을 탈출할 가능성은 높아지고 빈곤에 진입할 가능성은 낮아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청년층의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높은 교육수준과 불안정 고용을 고려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주제어 : 청년빈곤, 근로빈곤, 고용불안, 빈곤이행

1. 서론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과 장기적 경기침체, 저임금, 불안정 고용 증대라는 노동시장의 변화는 한국 사회의 빈곤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노동시장 경험이 없는 청년층은 노동시장에서 낮은 위치에 놓여있다는 점에서 최근의 경제적 충격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

* 본 논문은 제4회 한국복지패널학술대회 대학원 논문경진대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공동주최)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논평을 주신 남상호 박사님과 이대창 박사님, 심사과정에서 좋은 의견을 주신 익명의 심사자 분들께 감사드린다.

원을 받는 아동에서 다른 세대를 부양할 경제적 능력을 갖춘 성인으로 이행해야 할 청년들이 고용불안과 빈곤의 위험에 동시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¹⁾ 청년층은 새로운 빈곤 취약계층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김수정, 2010: 51), 청년층의 경제적 불안을 완화하는 것은 사회정책이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부상했다.

청년기에 경험하는 빈곤과 고용불안은 이들의 전 생애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이 있다. 청년기의 결혼과 출산, 노동시장에서의 일자리 경험, 교육훈련 등은 중장년기의 노동시장 참가 양태 및 평생소득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안주엽·홍서연, 2002: 50), 청년기의 고용불안과 실업의 장기화는 인적자본의 형성을 저해하고, 개인의 생애소득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성장 토대를 약화시킬 수 있다(손혜경, 2009; 삼성경제연구소, 2010). 뿐만 아니라 빈곤상태에 놓인 부모가구에 속했던 청년이 출생(natal) 가구에서 독립한 이후에도 빈곤상태가 지속된다면 이는 결국 '빈곤의 대물림'을 의미한다²⁾. 따라서 청년빈곤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완화하는 것은 빈곤의 악순환과 확대를 끊는 열쇠가 될 수 있다.

청년층의 경제적 곤란이 심화되고 있어 청년빈곤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지만 청년빈곤에 대해 설명하는 연구는 드물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청년이 실업이나 고용불안정으로 인해 겪게 되는 경제적 곤란 보다는 고용 자체에 초점을 맞춰왔다(안주엽·홍서연, 2002; 반정호·김경희·김경휘, 2005; 남재량·이철인·전영준·우석진, 2010; 반정호, 2010a; 2010b). 빈곤분야에서도 청년층은 관심에서 벗어나 있었다. 빈곤 연구들은 대부분 경제위기 이후 새롭게 등장한 근로빈곤층에 대해 설명하거나(구인회, 2002; 이태진, 2003; 홍경준, 2005; 금재호, 2006; 김교성·최영, 2006; 임세희, 2006; 노대명·황덕순·유진영·이은혜·원일, 2007; 지은정, 2007; 최옥금, 2008; 노대명·홍경준·최승아·전지현·박은영, 2009; 이병희, 2010), 전통적 빈곤 취약계층인 노인, 여성, 아동의 빈곤에 집중해왔다(최현수·류연규, 2003; 김미숙·배화옥, 2007; 최옥금, 2007; 신현중·김희연, 2008; 김은하, 2009). 이는 청년층의 빈곤이 아동에서 성인으로 이행하는 생애주기에 발생하는 일시적 현상이고, 청년층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초기 노동시장 진입을 통한 탈빈곤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김수정, 2010: 51).

그러나 최근의 경제상황과 노동시장의 변화는 노동시장 진입을 통한 청년층의 탈빈곤 가능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고용의 관점에서 청년빈곤의 양상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특히 청년층이 근로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집단인 전통적 빈곤 위험층(아동, 노인 등)과는 달리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근로능력집단이라는 점에서 청년빈곤은 근로빈곤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며, 노

1) 통계청의 <고용동향>에 따르면 만 15~29세 청년실업률은 2011년 3월 현재 9.5%로 전체 실업률 4.3%의 두 배를 넘는 수준이고, 전체 취업자 수는 늘었지만 20대와 30대 취업자 수는 각각 8.6만 명, 3.7만 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현재 만 18-24세 청년 가구주의 빈곤율은 34.6%로 근로 가능 연령인 65세 미만 가구주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중위소득 60%를 기준으로 한 25-29세의 빈곤율도 11.7%에 이른다(김수정, 2010:62).

2) '빈곤의 대물림'의 측면에서 청년층에 대한 연구는 빈곤가구나 근로빈곤가구에 속한 청소년의 교육 성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대해서는 김경휘(2008), 방하남·김기현(2001), 여유진·김수정·구인회·김계연(2007)을 참조하기 바란다.

동시장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신규일자리 감소로 인해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가능성은 줄어들었으며, 어렵게 노동시장에 진입하더라도 비정규직과 저임금 일자리 증대라는 노동시장 구조 변화는 청년층의 경제적 독립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낮은 경제활동참가율, 높은 실업률, 그리고 잦은 직장이동으로 특징 지워지는 청년층의 노동시장 특성, 청년층의 고용구조가 경기변동이나 시장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고용상태의 변화가 청년층의 경제적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안주엽·홍서연, 2002:48).

따라서 본 연구는 청년빈곤의 원인을 고찰함에 있어서 고용요인에 초점을 맞추고 근로능력이 있는 청년층의 고용상태의 변화에 따라 그들의 경제적 상태가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확인한다. 특히 최근 경기침체에 있어서 청년층의 경제적 상태의 변화를 빈곤진입과 빈곤탈출이라는 빈곤동학으로 측정하여 청년층이 겪는 노동시장에서의 어려움이 이들의 빈곤이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데이터의 3개연도 자료에서 청년근로능력자를 추출하여 그들의 빈곤이행과 고용상태 변화를 확인하고, 청년층의 고용불안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중단연구이다.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7년부터 2009년 사이의 청년빈곤층의 규모를 확인한다. 청년층 내부의 이질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으로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인구 사회학적, 경제적 요인에 따른 청년빈곤층 규모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빈곤진입과 빈곤탈출이라는 빈곤동학의 특성을 확인함으로써 청년층의 경제적 불안이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고용상태가 청년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청년근로빈곤층과 청년비빈곤근로능력자를 대상으로 빈곤탈출과 빈곤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여 청년빈곤 완화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것이다.

2. 청년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빈곤의 원인을 설명하는 많은 연구들은 인구학적 특성, 가구특성, 경제사회적 특성 등으로 빈곤을 설명한다. 연구대상에 따라 핵심요인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예로 근로빈곤층에 대한 연구에서는 고용특성을 강조한다(구인회, 2002; 김교성·반정호, 2004; 금재호, 2006; 지은정, 2007; 노대명 외, 2009; 이병희, 2010). 청년층이 지닌 고유의 특성이 있다고 전제할 때 청년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전체 연령층과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청년층 고유의 특성을 살펴보고, 기존 실증연구를 토대로 청년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청년빈곤을 이해하려면 우선 청년기의 특성을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청년기는 생애주기에 있어서 아동에서 성인으로의 이행하게 되는 중간적 단계이다(이병희·장지연·윤자영·성재민·안서영, 2010). 20세기 초 '청소년(adolescence)'이라는 개념이 발견된 것처럼, 사회철학자들은 반(semi) 자율성을 지니고 성인으로서의 책임을 점진적으로 획득하는 새로운 생애단계로써 청년기를 조망한다(Fussell and Fustenberg, 2008: 1). 교육수준의 향상, 부모가구로부터의 독립과 결혼연령 상승으로 청년기는 연장되어왔으며(상동, 2008: 2), 경제위기는 이를 더욱 지체시킬 수 있다. 경제위기 시기에는 부모가구에

서 독립하는 것보다는 남는 것이 경제적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합리적 선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청년층의 특징은 청년빈곤이 부모가구의 경제적 상태에 귀속되는 아동빈곤의 특징을 갖게 만들며, 경제위기와 노동시장 구조변화로 인한 고용불안은 청년층이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가난하거나, 혹은 일하면서도 가난한 상태에 놓일 위험을 증대시킬 수 있다.

청년빈곤에 대한 연구는 한국보다 먼저 청년실업이 이슈가 된 유럽을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특히 많은 연구들은 청년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으로 가족구조, 교육수준, 고용상태를 지적한다(Kangas and Palme, 2000; Iacovou and Berthoud, 2001; Smeeding and Phillips, 2002; Assave, Davia, Iacovou and Mencarini, 2005; Assave, Iacovou and Mencarini, 2006).

첫째, 가구내 지위가 청년빈곤에 미치는 영향은 성인으로서의 이행을 연기함으로써 빈곤을 예방한다는 것으로 설명된다. 다수의 연구들은 청년층의 경우, 전반적으로 출생가족과의 동거라는 빈곤 방어요인이 없는 경우에는 빈곤에 노출될 위험이 더 커진다고 분석하고 있다(Iacovou and Berthoud, 2001; Aassve et al, 2006: 27-28 재인용).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와 달리, 출생가족과의 동거 혹은 독립이 빈곤을 예방하거나 위험을 높이는 한 방향으로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청년은 부모가구의 자녀로 남아있는 비율이 높아 이들이 청년빈곤층의 60%를 차지해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빈곤여부가 결정되어 아동빈곤의 특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지위가 자녀인 청년층의 빈곤율(9.6%)은 기혼가구주나 배우자인 경우의 빈곤율(7.5%~7.9%)보다 높았고, 미혼가구주인 경우(19.6%)보다 낮았다(김수정, 2010: 64).

이처럼 가구내 지위가 청년빈곤에 미치는 영향이 단선적이지 않은 것은 출생가족으로부터의 독립이 결혼과 밀접히 연결되고, 결혼을 통한 독립은 결국 경제적 수준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이상호·이상현, 2010). 결혼을 해서 독립한 청년층은 이미 경제적 수준이 안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독립의 연기는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소득 가구 청년층은 이행을 연기를 통해 보다 나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지만 저소득 가구 청년층은 빈곤의 일시적인 지연에 불과할 수 있다. 청년이 취업을 할 경우에는 부가노동자 효과로 출생가족의 빈곤을 예방할 수 있겠지만 청년입장에서는 근로소득의 소진으로 인해 독립의 시기가 더 연장되고, 뒤늦게 독립을 하더라도 근로빈곤층에 편입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청년층의 교육수준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빈곤할 가능성이 낮다는 인적자본론에 근거한 기존 연구들과 맥을 같이한다. 청년층은 중장년층에 비해 교육수준이 높기 때문에 빈곤율이 낮을 수 있다. 하지만 높은 교육수준은 과잉학력문제로 인한 취업연기와 하향취업을 야기해 청년의 빈곤위험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중시킬 수 있다³⁾. 이에 더해 교육수준이 낮은 청년

3) 첫째, 청년층의 높은 교육수준은 다수의 청년들이 더 나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취업을 연기하게 만든다. 교육수준에 따른 임금격차가 현저하고 분단노동시장구조로 인해 저임금에서 고임금 일자리로의 이동이 차단되는 상황에서 청년층 다수는 빨리 취업하는 것보다는 더 나은 일자리를 탐색하거나, 인적자본을 높이는(교육수준을 향상시키거나, 취업훈련을 받는) 선택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Pavis, Platt and Hubbard, 2000; 이시균, 2010). 이는 숙련수준에 있어서 노동공급과 수요의 불일치를 의미하는 과잉학력(overeducation)의 문제를 심화시킨다. 둘째, 학력과잉 상태에서 좋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 한 청년층은 하향취업을 하게 되는데, 이는 임금저하와 고용불안정 증대로 이어진다.

층은 일자리 경쟁에서 배제되어 더 열악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청년층에게 교육수준은 빈곤에서 벗어나게 해 주는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필요조건으로는 강력한 기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년층은 일을 할 수 있는 연령층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빈곤은 노동과 밀접하게 관련될 수밖에 없다. 청년 빈곤층의 사회적 배제의 핵심이 노동시장 배제로 설명되는 것도 이러한 맥락과 맞닿아 있다(Fahmy, 2002: 12). 근로빈곤층의 빈곤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들은 고용특성이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라고 분석한다. 취업은 근로빈곤층이 빈곤을 탈출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일자리의 질도 주요인이다(구인회, 2002; 노대명 외, 2009). 한편, 가구주가 안정된 고용상태(정규직)를 유지할수록 빈곤탈피의 가능성은 높으며, 동시에 불안정한 고용상태(비정규직과 실업)를 유지하는 빈곤가구의 빈곤진입 가능성은 안정된 고용상태를 유지하는 빈곤가구보다 높다(김교성·반정호, 2004: 50). 노동시장에서의 불안정 고용과 저임금은 근로빈곤층의 빈곤에 영향을 준다(김재호, 2006; 이병희, 2010).

특히 최근 청년층의 높은 실업은 청년계층이 신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며, 잦은 노동이동과 이에 따른 상대적으로 짧은 근속기간, 불안정한 고용형태를 경험하게 만든다(반정호 외, 2005: 74). 청년층은 중장년층에 비해 거시경제적 변동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경기침체에 청년 노동자는 취업하더라도 쉽게 해고될 수 있다(Berg, Lomwel and Ours, 1998: 3). 이러한 상태에서 짧은 경력과 노동시장에의 첫 진입이라는 청년층의 취약한 특성은 이들의 빈곤위험을 높이고, 실업을 증대와 일자리의 질 하락은 청년층이 노동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감소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⁴⁾. 근로빈곤의 특징을 보이는 청년층에게 있어서 실업은 빈곤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며(Assave et al, 2006: 28), 최근의 경기침체와 노동시장 변화는 이들의 고용불안정성을 높여 이들이 빈곤할 위험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층의 고용과 빈곤에 대한 국내연구는 몇 가지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반정호 외(2005: 75)는 2002년에서 2003년 사이에 대규모의 청년층이 실업이나 비정규직으로 이행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비정규직 고용의 증가나 빈번한 고용형태의 전환은 일하는 빈민을 양산하며 계층 간 소득격차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어 빈곤의 장기화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청년 빈곤 가구주는 취업률이 낮고 취업하더라도 소득수준이 100만원에 미치지 못해 실업상태에 있거나 저임금 취업이라는 근로빈곤적 특징을 나타내며(김수정, 2010: 64), 외환위기 이전 시점에 비해 최근 10여 년 동안 청년층의 가구소득 및 근로소득이 증가하지 않았으며, 고용이 불안정한 계층일수록 절대적 소득규모가 작고 고용형태 간 근로소득 격차도 상당히 커지고 있다(반정호, 2010a: 13).

이상의 논의에서 알 수 있듯, 청년빈곤은 근로빈곤의 특징으로 인해 고용상태와 수준에 영향을 받는다. 높은 실업률이라는 경기침체에 있어서 청년층은 취업할 기회가 줄어들었고, 일자리를 얻더라

하향취업자는 적정취업자에 비해 임금수준이 낮고, 잦은 이동을 경험하며, 직무만족도 역시 떨어진다는 연구들이 이를 뒷받침 한다(문혜진, 2012:16).

4) 청년실업률의 증가는 청년층의 잦은 이직, 교육기간의 연장에 따른 경제활동참여율의 하락, 신규일자리 수의 감소, 학력과잉에 의한 노동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등으로 설명되곤 한다(이병희, 2002: 남재량, 2006; 박성재·반정호, 2007; 박강우·홍승제, 2009).

도 불안정 고용으로 인해 빈곤에 놓일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립을 연기하게 된 청년은 출생가족에 의해 영향을 받는 아동빈곤의 특징을 보이게 되고, 경제적 안정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독립한 청년은 그렇지 않은 청년에 비해 빈곤상태에 놓일 위험이 크다. 교육수준의 상향평준화와 노동시장의 수요불일치는 취업의 연기와 하향취업을 증대시켜 청년간의 경제적 불안의 격차를 더욱 크게 만들 수 있다.

청년빈곤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청년빈곤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핵심은 고용상태 변화라는 노동요인에 의해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년빈곤을 다룬 기존의 연구는 청년 가구주를 대상으로 빈곤여부에 대한 요인만을 분석하고 있어서 근로빈곤의 특징을 보이는 청년빈곤의 빈곤이행의 역동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을 구하기 어렵다(김수정: 2010). 따라서 본 연구는 청년들이 경험하는 고용불안이 그들의 경제적 상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주목한다. 청년층의 고용불안정에 초점을 맞추어 그들의 고용상태 변화가 빈곤여부 변화(빈곤이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청년층의 경제적 곤란을 완화하는데 있어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가 실시한 한국복지패널조사의 제3차 연도(2007년)부터 제5차 연도(2009년)까지 3년간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한국복지패널조사는 외환위기 이후 빈곤층 및 차상위층의 실태변화를 동태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소득계층별 경제활동상태별 연령별 등 각 인구집단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등을 역동적으로 파악하고 정책효과성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종단면 조사(longitudinal survey)로 현재 5차년도(2009)까지 조사가 완료되었으며 가구원의 원표본 유지율은 80.3%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본 연구는 각 년도의 가구자료와 가구원 자료를 결합한 데이터를 연결해 사용하였으며 3개 년도의 조사가 완료된 가구원(개인)으로 연구대상을 한정하였다⁵⁾. 청년 근로능력자를 추출하기 위해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비학생 인구를 추출하고 한국복지패널조사에서 제공하는 근로능력유형 중 <근로능력 있음>과 <단순근로 가능함>을 근로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반영했다⁶⁾.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얻은 연구의 최종 분석사례는 총 1,659개이다.

5) 패널자료의 특성상 중도 탈락한 가구의 청년은 제외되었다. 한국복지패널의 경우, 중도탈락가구 중 대부분이 저소득가구라는 점에서 편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석상 주의가 필요함을 밝힌다.

6) 일터에서 중일 노동이 가능한 '근로가능'과 일터에서 중일근로가 어렵거나, 장애, 질병 등으로 거동이 불편해 집에서 돈벌이를 할 수 있는 '단순근로가능'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청년층의 고용불안정이 그들의 빈곤 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연구대상을 청년 근로능력자로 한정한다. 근로빈곤층에 대한 정의는 근로능력 빈곤층, 취업 빈곤층, 경제활동 빈곤층, 근로연령 빈곤층 등으로 다양하다(노대명 외, 2009: 15). 본 연구는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 중 취업상태이거나 비취업 상태의 개인을 포함하는 근로능력 빈곤층을 근로빈곤층이라고 정의하였다. 청년의 정의 역시 다양한데 다수의 청년들이 취업준비를 이유로 졸업을 미루고 있고, 독립된 가구를 형성하는 초혼 연령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청년 근로능력자를 만 18세 이상 34세 미만의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학생인구 제외)로 정의한다.⁷⁾⁸⁾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인 근로능력이 있는 청년은 취업자와 실업자 및 구직자, 비경제활동인구 중 학생이 아닌 청년을 모두 포함한다. 이들 중 가구소득이 빈곤선(최저생계비 및 중위소득 60%)에 못 미치는 청년 근로능력자가 청년 근로빈곤층으로 구분된다. 성인으로서의 독립을 연기하는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하여 빈곤은 가구단위가 아닌 개인단위로 측정하였으며 근로를 함에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빈곤위험계층을 포괄하기 위해 빈곤선을 중위소득 60%를 기준으로 제한했다.

3) 분석방법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특정 시점의 빈곤여부에 초점을 맞춘 횡단적(cross-sectional) 연구와 빈곤과 탈빈곤의 동태를 확인하는 종단적(longitudinal) 연구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는 청년층의 빈곤이행 동태를 확인하기 위해 패널자료를 이용한 종단적 분석을 시행한다. 본 연구는 특정 기간 동안의 청년 근로능력자의 빈곤이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비관측변인으로 인한 편의를 최소화하기 위해 빈곤이행 관측 시점은 2개연도로 제한하였으며, 제한적이나마 빈곤지속기간을 통제하기 위해 빈곤이행 관측 시점 전연도의 빈곤여부 변수를 통제변수로 투입한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 근로빈곤층의 규모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이용하고, 빈곤경험과 고용상태가 빈곤탈출과 진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했

7) 통상적으로 청년층은 신체적 혹은 정서적 발달 측면에 기초해 만 18세 이상 29세 미만으로 정의하며(반정호, 2010a), 고용노동부 등 정부기관은 청년층을 만 15세 이상 29세 미만으로 정의하고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최근 청년층의 이행 곤란(독립의 연기)을 고려해 30대를 청년층에 포함시키고 있다(김수정, 2010; 반정호, 2010 a,b).

8) 한국복지패널조사는 경제활동상태를 조사시점 조사년도 말 현재를 기준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불규칙적 일자리나 계절성이 강한 일자리에 한해 지난 1년간 주되게 해온 일자리로 응답하도록 하고 있다.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로 나뉘는데 첫째, 취업자는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자활 및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봉사를 의미하며, 둘째, 실업자는 지난 4주 동안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일을 하지 못하였으며, 구직활동을 한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비경제활동인구는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 청년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빈곤탈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청년 근로능력자를 대상으로 빈곤 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했으며 고용관련 변수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고용상태, 고용불안, 직업 변수를 각각 독립변수로 투입해 분석을 실시하였다.⁹⁾

4) 변수의 정의와 측정방법

본 연구에서는 청년층의 빈곤탈출과 진입의 변화를 종속변수로 하고, 이를 결정하는 독립변수를 노동시장에서의 고용상태, 고용불안정, 직업으로 설정한다. <표 1>은 주요변수에 대한 정의와 단위이다.

첫째, 종속변수인 빈곤탈출은 2008년 현재 청년 근로빈곤층이 그 다음 해인 2009년에 빈곤을 탈피하는지 여부로 측정하고, 빈곤진입은 2008년 현재 청년 근로능력자 중 비빈곤층이 2009년에 빈곤에 진입하는지 여부로 측정한다.

둘째, 독립변수인 노동시장에서의 고용불안정성은 고용형태(일자리의 수준)와 고용상태의 변화(일자리의 이동)로 측정한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고용불안정 정도를 실업률이나 비정규직 비율로 파악하거나, 연구대상자의 고용상태(실업자, 정규취업자, 비정규취업자)와 산업별 직업별 형태 등으로 분석한다(김교성·반정호, 2004:35). 청년층은 일자리 이동이 잦다는 점에서 이러한 특정 시점의 고용형태나 직업만으로 고용불안정을 측정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취업과 비취업이라는 일자리 이동을 고용불안정 변수로 반영하였다.

고용형태를 측정하는 변수로 2008년 현재 고용형태(비취업, 정규직, 비정규직)와 직업(전문가, 사무직, 단순일용직 등)을 반영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고용관계, 근로시간형태, 근로계약 지속가능성으로 구분하였다. 직접고용, 전일제, 지속가능한 무기계약인 경우 정규직으로 구분하고, 이 중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비정규직으로 구분했다. 일자리의 이동을 측정하기 위해 반정호 외(2005)와 노대명 외(2009)가 사용한 변수를 일부 수정해 사용하였다. 이는 취업과 비취업의 이동,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이동을 변수에 반영하는 것인데 본 연구에서는 취업과 비취업의 이동을 고용불안 변수로 반영하였다. stable type은 2년 동안 취업을 유지한 경우, unstable type은 취업에서 비취업으로 이동한 경우, bridge type은 비취업에서 취업으로 이동한 경우, trap type은 비취업상태를 유지한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기타 변수 중 주요 변수는 다음과 같이 측정하였다. 주요 인구사회학적 변수는 저량(stock) 변수로 2008년 현재의 특성을 반영한다. 가구원 수 변화와 가구내 취업자 수 변화, 소득변수는 유량(flow) 변수로 2008년과 2009년 사이의 변화로 측정하였다. 빈곤경험은 빈곤탈출과 빈곤진입을 측정하는 시기 이전인 2007년도에 빈곤한 경험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뉘며, 빈곤의 시작시기와 종료 시기를 파악할 수 없는 좌우측 절단(left or right censoring)문제와 빈곤의 지속기간은 반영하지 않는다.

9) 한국복지패널조사가 저소득층을 과대표집한 자료라는 점에서 기술통계에 있어서는 각 시점의 횡단면가중치를, 빈곤이행 분석에 있어서는 5차 연도의 종단면가중치를 적용하였다.

<표 1> 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

| 구분 | | 변수설명 | 속성 및 단위 | |
|------------------|---------------|--|---|----|
| 종속 변수 | 빈곤탈출 | 빈곤(2008년) → 비빈곤(2009년) | 빈곤탈출=1, 빈곤지속=0 | |
| | 빈곤진입 | 비빈곤(2008년) → 빈곤(2009년) | 빈곤진입=1, 비빈곤지속=0 | |
| 인구사 회학적 변수 | 성 | 성별 | 남=0, 여=1 | |
| | 연령 | 2008년 현재 만 나이 | 24세이하=1, 29세 이하=2, 34세 이하=3 | |
| | 교육수준 | 2008년 현재 교육정도 | 고학력(전문대학이상)=1, 저학력(고졸미만)=2, 고졸=3 | |
| | 건강상태 | 2008년 현재 건강상태 | 1~5(클수록 건강상태 나쁨) | |
| | 가구지위 | 2008년 현재 가구지위 | 가구주=1, 배우자=2, 자녀·형제=3 | |
| | 혼인상태 | 2008년 현재 혼인상태 | 기혼=1, 미혼·이혼·사별=2 | |
| | 가구원 수 변화 | 2008년과 2009년 가구원 수 차이 | 명 | |
| | 가구 취업자 수 변화 | 2008년과 2009년 취업자 수 차이 | 명 | |
| | 소득 변수 | 재산소득 변화 | 2008년과 2009년 재산소득 차이 | 만원 |
| | | 사적이전소득 변화 | 2008년과 2009년 사적이전소득 차이 | 만원 |
| 공적이전소득 변화 | | 2008년과 2009년 공적이전소득 차이 | 만원 | |
| 빈곤 경험 | 2007년 빈곤경험 여부 | 2007년 상대빈곤 기준 빈곤층 여부 | 비빈곤=0, 빈곤=1 | |
| 고용변 수 | 고용형태 | 2008년 현재 고용형태 | 정규직=1, 비정규직=2, 비취업자(실업 및 비경황)=3 | |
| | 고용불안 | 취업(2008년) → 취업(2009년) 비취업(2008년) → 취업(2009년) 취업(2008년) → 비취업(2009년) 비취업(2008년) → 비취업(2009년) | stable type bridge type unstable type trap type 비취업=0 | |
| | 직업 | 2008년 현 직장의 직업종류 | 관리자·전문가=1 사무직=2 서비스·판매=3 기능·기계=4 단순노무·농어업=5 | |

4. 분석결과

1) 청년 근로빈곤층의 규모 및 특성

<표 2>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청년 근로능력자의 빈곤율이다.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한 청년층의 절대빈곤은 2007년 2.7%에서 2008년 2.6%로 주춤하다가, 2009년 1.7%로 약 0.9%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도시근로자 가구를 기준으로 한 절대빈곤율(2009년의 경우 4.7%)보다 낮

은 수준으로(김문일·김태완·전지현, 2010: 10) 근로능력이 있는 청년층이 다른 연령대보다 빈곤할 가능성이 낮다는 기존 연구의 결과를 반영한다. 이는 상대빈곤에서도 유사하다.

〈표 2〉 청년 근로빈곤층의 규모

(단위: 명, %)

| 구 분 | 절대빈곤 | | | 상대빈곤 | | |
|-----|-------------|-------------|-------------|-------------|-------------|-------------|
|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 비빈곤 | 1,830(97.3) | 2,278(97.4) | 2,391(98.3) | 1,750(93.1) | 2,141(91.5) | 2,272(93.5) |
| 빈곤 | 51(2.7) | 62(2.6) | 40(1.7) | 131(6.9) | 199(8.5) | 159(6.5) |

주) 절대빈곤 : 최저생계비, 상대빈곤 : 중위소득의 60% (기준소득은 기초보장급여수급전 경상소득임)

〈표 3〉은 상대빈곤을 기준으로 한 청년 근로빈곤층의 빈곤횟수별 규모이다. 3년 동안 한 번이라도 빈곤을 경험한 청년(1회~3회 빈곤경험)은 357명으로 전체 청년 근로능력자의 14.54%를 차지했다. 1회 빈곤한 상태에 놓여있던 청년은 8.84%였으며, 3년 동안 계속 빈곤 상태에 놓여있던 청년은 2.08%에 불과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근로빈곤층이 계속빈곤, 항상빈곤 보다 일시빈곤과 반복빈곤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치해 청년 근로능력자 역시 일시빈곤과 반복빈곤이라는 측면에서 빈곤의 동태, 빈곤이행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¹⁰⁾.

〈표 3〉 빈곤횟수에 따른 청년 근로빈곤층의 규모

(단위: 명, %)

| 구 분 | 빈곤경험 | 비빈곤 | 1회 빈곤 | 반복빈곤 | 계속빈곤 |
|-----|------------|--------------|-----------|----------|----------|
| 규모 | 357(14.54) | 2,098(85.46) | 217(8.84) | 89(3.62) | 51(2.08) |

주 1) 상대빈곤 기준 빈곤

2) 비빈곤 :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한 번도 빈곤하지 않은 비빈곤층, 빈곤경험 : 3년 동안 한 번이라도 빈곤상태에 놓인 경우(=1회빈곤+반복빈곤+계속빈곤), 1회 빈곤 : 3년 동안 1회 빈곤상태에 놓인 경우, 반복빈곤 : 3년 동안 2회 빈곤상태에 놓인 경우, 계속빈곤 : 3년 동안 계속 빈곤한 경우

청년 근로능력자의 주요 변수별 특징은 〈표 4〉와 같다. 특히 연령대별 빈곤율은 3년 동안 모두 24세 이하의 빈곤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연령층에서는 고령일수록 빈곤할 가능성이 높지만, 청년층으로 연구대상을 한정할 경우에는 연령이 낮을수록 빈곤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20대 이전이나 초반에 빈곤이 감소하는 서구에 비해 한국은 아동기가 끝난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에 빈곤이 증가한다는 김수정(2010:58)의 분석과 일치한다. 주목할 점은 2007

10) 한국노동패널의 전체 가구 중 2001년부터 2003년까지 한 번이라도 빈곤(중위소득 50% 미만)을 경험한 가구는 32.5%나 되지만 줄곧 빈곤상태에 놓여있던 가구는 5.6%에 지나지 않는다(김재호, 2006: 56). 한국노동패널의 근로능력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 2002년부터 2006년도까지 5년 동안 빈곤(중위소득 50% 미만)을 경험한 계층은 43.2%이며, 연속 3년 이상 빈곤한 지속빈곤이 16.5%, 한 해에만 빈곤한 일시빈곤이 14.3%, 빈곤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거나 2년 연속 빈곤을 경험한 계층은 12.4%인 반면, 5년 내내 빈곤에 머무르는 빈곤층은 8.5%였다(이병희, 2010: 108).

년에 비해 2009년 전체 빈곤율은 하락했지만 30대 빈곤율은 오히려 증가했다는 점이다(5.5%에서 6.4%로 0.9%포인트 증가). 이는 다른 청년층에 비해 일자리, 가족구조 등의 측면에서 안정적인 단계로 진입해야 할 30대의 빈곤위험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 등을 고려할 때 이는 개인의 빈곤을 넘어서 새로운 빈곤가구의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정책지원이 요구된다.

〈표 4〉 주요 변수별 특성

(단위: 명, %)

| 구분 | 2007년 | | | 2008년 | | | 2009년 | | |
|--------|------------|----------|------|-------------|-----------|------|-------------|----------|------|
| | 비빈곤 | 빈곤 | 빈곤율 | 비빈곤 | 빈곤 | 빈곤율 | 비빈곤 | 빈곤 | 빈곤율 |
| 성 | | | | | | | | | |
| 남성 | 750(42.9) | 57(43.5) | 7.1 | 960(44.8) | 85(42.7) | 8.1 | 1027(45.2) | 65(40.9) | 6.0 |
| 여성 | 999(57.1) | 74(56.5) | 6.9 | 1181(55.2) | 114(57.3) | 8.8 | 1245(54.8) | 94(59.1) | 7.0 |
| 연령 | | | | | | | | | |
| 24세 이하 | 345(19.7) | 42(32.3) | 10.9 | 328(15.3) | 43(21.7) | 11.6 | 243(10.7) | 29(18.2) | 10.7 |
| 29세 이하 | 789(45.1) | 52(40.0) | 6.2 | 1071(50.0) | 100(50.5) | 8.5 | 1042(45.9) | 62(39.0) | 5.6 |
| 34세 이하 | 616(35.2) | 36(27.7) | 5.5 | 742(34.7) | 55(27.8) | 6.9 | 987(43.4) | 68(42.8) | 6.4 |
| 교육 | | | | | | | | | |
| 수준 | | | | | | | | | |
| 고학력 | 1241(70.9) | 60(46.2) | 4.6 | 1557(72.7) | 96(48.2) | 5.8 | 1657(72.9) | 73(45.9) | 4.2 |
| 저학력 | 27(1.5) | 14(10.8) | 34.1 | 34(1.6) | 17(8.5) | 33.3 | 28(1.2) | 21(13.2) | 42.9 |
| 고졸 | 482(27.5) | 56(43.1) | 10.4 | 550(25.7) | 86(43.2) | 13.5 | 587(25.8) | 65(40.9) | 10.0 |
| 가구 | | | | | | | | | |
| 지위 | | | | | | | | | |
| 가구주 | 415(23.8) | 26(20.0) | 5.9 | 500(23.3) | 46(23.2) | 8.4 | 591(26.0) | 38(23.9) | 6.0 |
| 배우자 | 479(27.4) | 27(20.8) | 5.3 | 530(24.7) | 41(20.7) | 7.2 | 575(25.3) | 37(23.3) | 6.0 |
| 자녀 | 810(46.4) | 75(57.7) | 8.5 | 1,054(49.2) | 111(56.1) | 9.5 | 1,053(46.3) | 84(52.8) | 7.4 |
| 형제 기타 | 41.0(2.3) | 2.0(1.5) | 4.7 | 58(2.7) | 0.0 | 0.0 | 54(2.4) | 0(0.0) | 0.0 |
| 가구내 | | | | | | | | | |
| 취업자 수 | | | | | | | | | |
| 0명 | 383(21.9) | 69(52.7) | 15.3 | 29(1.4) | 51(25.8) | 63.8 | 26(1.1) | 38(23.9) | 59.4 |
| 1명 | 968(55.3) | 56(42.7) | 5.5 | 821(38.4) | 89(44.9) | 9.8 | 915(40.3) | 78(49.1) | 7.9 |
| 2명 | 377(21.5) | 4(3.1) | 1.0 | 800(37.4) | 47(23.7) | 5.5 | 778(34.3) | 36(22.6) | 4.4 |
| 3명 | 22(0.9) | 2(1.5) | 11.8 | 375(17.5) | 11(5.6) | 2.8 | 415(18.3) | 7(4.4) | 1.7 |
| 4명 이상 | 7(0.4) | 0(0.0) | 0.0 | 115(5.3) | 0(0.0) | 0.0 | 137(6.0) | 0(0.0) | 0.0 |
| 고용 | | | | | | | | | |
| 형태 | | | | | | | | | |
| 정규직 | 742(42.4) | 21(16.0) | 2.8 | 955(44.6) | 38(19.1) | 3.8 | 866(38.1) | 13(8.2) | 1.5 |
| 비정규직 | 393(22.5) | 28(21.4) | 6.7 | 522(24.4) | 44(22.1) | 7.8 | 800(35.2) | 58(36.5) | 6.8 |
| 비취업 | 614(35.1) | 82(62.6) | 11.8 | 664(31.0) | 117(58.8) | 15.0 | 606(26.7) | 88(55.3) | 12.7 |
| 전체 | 1,749 | 131 | 6.9 | 2,141 | 199 | 8.5 | 2,272 | 159 | 6.5 |

주) 빈곤율은 각 특성을 전체로 했을 때 상대빈곤선 미만 빈곤인구 비율임(예: 2007년도 남성빈곤율은 전체 남성 807명 중 빈곤인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

기존의 빈곤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청년 근로능력자 역시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빈곤율이 높았다. 주목할 전체 근로능력자 중 빈곤층을 대상으로 분석한 기존연구(노대명 외, 2007: 121)에 비해 전문대 이상 고학력자의 비중이 높고, 고졸 미만 저학력자의 비중이 낮다는 것이다. 이는 청년층의 교육수준이 중·고령세대에 비해 높아졌으며 이로 인해 앞서 서술한 과잉학력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을 암시한

다. 가구지위의 경우 가구주나 배우자인 경우보다 자녀인 경우 빈곤율이 높았다. 이는 기혼가구주와 배우자의 빈곤율이 자녀인 청년의 빈곤율보다 낮다고 분석한 김수정(2010: 63)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고용형태의 경우, 정규직의 빈곤율 보다 비정규직이나 비취업자의 빈곤율이 높았다. 게다가 청년 근로빈곤층은 청년 비빈곤 근로능력자에 비해 비취업자의 비율은 매우 높고, 정규직의 비율은 낮았다. 2009년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빈곤율 차이가 4배 이상으로 매우 커진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정규직의 빈곤율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취업을 하더라도 비정규직과 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의 차이가 빈곤에 빠질 위험을 더욱 높일 수 있음을 의미하며, 비취업자와 비정규직이 다수를 차지하는 청년층의 경우 그 위험이 더욱 가중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2) 빈곤이행 형태별 특성

2008년과 2009년 사이 빈곤과 비빈곤의 이동을 나타내는 빈곤이행에 따른 빈곤규모를 살펴보도록 하겠다(〈표 5〉 참조).

〈표 5〉 빈곤이행 형태 및 규모

| | 상태 변화 | | 빈도(%) | (단위: 명, %) 빈곤탈출률 및 진입률 |
|-------|-------|-------|-------------|------------------------------|
| | 2008년 | 2009년 | | |
| 빈곤지속 | 빈곤 | ⇒ 빈곤 | 79(3.2) | 62.7 |
| 빈곤탈출 | 빈곤 | ⇒ 비빈곤 | 133(5.4) | |
| 비빈곤지속 | 비빈곤 | ⇒ 비빈곤 | 2,161(88.0) | 3.7 |
| 빈곤진입 | 비빈곤 | ⇒ 빈곤 | 83(3.4) | |

주) 빈곤이행에 대한 분석은 2009년도 종단면가중치 적용

2년 동안 비빈곤을 지속한 경우는 전체의 88%로 다수를 차지했고, 빈곤한 상태에서 비빈곤 상태로 빈곤탈출을 경험한 청년 근로빈곤층은 전체 청년근로능력자의 5.4%였으며, 비빈곤 상태에서 빈곤상태로 빈곤진입을 경험한 청년 근로능력자는 3.4%였다. 2008년 빈곤 상태에 놓였던 청년 212명 중 62.7%인 133명이 다음 해인 2009년에는 빈곤에서 벗어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2008년 비빈곤 상태에 놓여있던 청년 2,244명 중 2009년에 빈곤에 진입한 청년은 83명으로 3.7%에 그쳤다.¹¹⁾ 이는 빈곤 탈출과 진입이 활발하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나, 빈곤탈출률은 기존 연구의 수치보다 높고, 빈곤진입률은 더 낮아 청년층이 빈곤에 놓일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¹²⁾

11) 한편, 2008년부터 2009년까지 2년 동안 빈곤을 지속한 근로빈곤층 중 2007년도에도 빈곤상태에 놓여있던 경우는 51명으로 65.4%에 달했으며, 2008년에는 빈곤을 벗어났다가 다시 빈곤상태에 놓인 반복빈곤은 19명으로 빈곤에 진입한 근로능력자 중 22.9%를 차지했다.

12) 금재호(2006: 64)는 2001년에서 2002년 사이에 취업자가 있으면서 빈곤상태에 놓여있던 가구의 48.5%가 빈곤을 벗어났고, 비빈곤 취업가구의 6.3%는 빈곤에 진입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석상훈(2011: 193)은 2007년에서 2008년 사이 가구의 빈곤 탈출확률을 49%로, 빈곤 진입확률은 5.0%라고 분석하였다.

〈표 6〉 빈곤이행 형태에 따른 인구사회학적·소득 특성

| | | (단위: 명, %) | | | | | |
|----------------|------------|------------|----------|----------|-------------|-------|------|
| 구분 | | 빈곤지속 | 빈곤진입 | 빈곤탈출 | 비빈곤지속 | 탈출률 | 진입률 |
| 성 | 남 | 37(47.4) | 28(33.7) | 54(40.6) | 981(45.4) | 59.3 | 2.8 |
| | 여 | 41(52.6) | 55(66.3) | 79(59.4) | 1,180(54.6) | 65.8 | 4.5 |
| 연령 | 24세 이하 | 15(19.0) | 21(25.0) | 32(24.2) | 342(15.8) | 68.1 | 5.8 |
| | 29세 이하 | 42(53.2) | 38(45.2) | 65(49.2) | 1,103(51.0) | 60.7 | 3.3 |
| | 34세 이하 | 22(27.8) | 25(29.8) | 35(26.5) | 717(33.2) | 61.4 | 3.4 |
| 교육 수준 | 고학력(대학 이상) | 23(29.1) | 51(61.4) | 80(60.6) | 1,590(73.5) | 77.7 | 3.1 |
| | 저학력 | 15(19.0) | 8(9.6) | 3(2.3) | 27(1.2) | 16.7 | 22.9 |
| | 고졸 | 41(51.9) | 24(28.9) | 49(37.1) | 545(25.2) | 54.4 | 4.2 |
| 가구 지위 | 가구주 | 20(25.6) | 17(20.2) | 28(21.2) | 471(21.8) | 58.3 | 3.5 |
| | 배우자 | 21(26.9) | 15(17.9) | 21(15.9) | 513(23.7) | 50.0 | 2.8 |
| | 자녀 | 37(47.4) | 49(58.3) | 83(62.9) | 1,119(51.8) | 69.2 | 4.2 |
| | 형제 등 기타 | 0(0.0) | 3(3.6) | 0(0.0) | 59(2.7) | - | 4.8 |
| 혼인 상태 | 기혼 | 26(33.3) | 22(26.2) | 43(32.6) | 821(38.0) | 62.3 | 2.6 |
| | 미혼·이혼·사별 | 52(66.7) | 62(73.8) | 89(67.4) | 1,340(62.0) | 63.1 | 4.4 |
| 가구내 취업자 수 변화 | 2명 이상감소 | 0(0.0) | 3(3.6) | 6(4.5) | 70(3.2) | 100.0 | 4.1 |
| | 1명 감소 | 13(16.7) | 38(45.2) | 17(12.8) | 331(15.3) | 56.7 | 10.3 |
| | 변화 없음 | 39(50.0) | 29(34.5) | 58(43.6) | 1,349(62.4) | 59.8 | 2.1 |
| | 1명 증가 | 24(30.8) | 13(15.5) | 36(27.1) | 378(17.5) | 60.0 | 3.3 |
| | 2명 이상증가 | 2(2.6) | 1(1.2) | 16(12.0) | 35(1.6) | 88.9 | 2.8 |
| 소득 변화 (만원, 평균) | 재산소득 | -1.9 | -93.6 | -1.1 | 24.8 | - | - |
| | 사적이전소득 | 83.5 | -91.6 | 133.3 | 17.3 | - | - |
| | 공적이전소득 | -76.8 | -79.8 | 15.6 | -3.0 | - | - |
| | 전체 | 78 | 83 | 133 | 2,161 | 62.7 | 3.7 |

빈곤이행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소득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6 참조). 여성인 경우 빈곤진입, 탈출, 지속에 있어서 남성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빈곤진입을 경험한 청년은 여성이 남성보다 두 배 가까이 높은 수치를 나타내 빈곤의 여성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빈곤진입과 빈곤탈출을 경험한 청년 중 20대 중반이 큰 비중을 차지했고, 빈곤탈출률은 20대 중반이 가장 높았으며 빈곤진입률은 20대 초반이 가장 높았다. 고학력자인 경우 빈곤탈출률은 고졸 미만의 저학력자보다 높았으며, 빈곤진입률은 낮았다. 자녀인 경우 빈곤탈출률이 가구주나 배우자인 경우보다 높았는데 이는 특정시점의 빈곤상태가 아닌 빈곤이행에 있어서는 가구내지위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빈곤이행 형태에 따른 고용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7 참조). 빈곤진입과 빈곤탈출을 경험

한 청년 근로능력자 중 비취업자의 비중이 가장 컸다. 정규직의 빈곤탈출률은 84.6%로 비정규직보다 20.0%포인트 높았으며 빈곤진입율도 이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가 빈곤이행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표 7〉 빈곤이행 형태에 따른 고용특성

| 구 분 | | | | | | (단위: 명, %) | |
|----------|------------------|----------|----------|----------|------------|------------|------|
| | | 빈곤지속 | 빈곤진입 | 빈곤탈출 | 비빈곤지속 | 탈출률 | 진입률 |
| 고용 형태 | 정규직 | 6(7.6) | 12(14.5) | 33(25.0) | 974(45.1) | 84.6 | 1.2 |
| | 비정규직 | 17(21.5) | 29(34.9) | 31(23.5) | 524(24.2) | 64.6 | 5.2 |
| | 비취업 | 56(70.9) | 42(50.6) | 68(51.5) | 664(30.7) | 54.8 | 5.9 |
| 고용 불안 | stable(취업-취업) | 15(19.2) | 22(26.5) | 51(38.3) | 1349(62.4) | 77.3 | 1.6 |
| | bridge(비취업-취업) | 20(25.6) | 17(20.5) | 36(27.1) | 241(11.2) | 64.3 | 6.6 |
| | unstable(취업-비취업) | 7(9.0) | 19(22.9) | 13(9.8) | 149(6.9) | 65.0 | 11.3 |
| | trap(비취업-비취업) | 36(46.2) | 25(30.1) | 33(24.8) | 422(19.5) | 47.8 | 5.6 |
| 직업 | 비취업 | 56(72.7) | 42(50.6) | 68(51.5) | 664(30.7) | 54.8 | 5.9 |
| | 관리자 · 전문가 | 0(0.0) | 12(14.5) | 17(12.9) | 461(21.3) | 100.0 | 2.5 |
| | 사무직 | 2(2.6) | 8(9.6) | 20(15.2) | 430(19.9) | 90.9 | 1.8 |
| | 서비스 · 판매 | 5(6.5) | 9(10.8) | 8(6.1) | 287(13.3) | 61.5 | 3.0 |
| | 기능 · 기계 | 1(1.3) | 3(3.6) | 12(9.1) | 196(9.1) | 92.3 | 1.5 |
| | 단순노무 · 농어업 | 13(16.9) | 9(10.8) | 7(5.3) | 123(5.7) | 35.0 | 6.8 |
| | 전체 | 78 | 83 | 133 | 2,161 | 63 | 3.7 |

고용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고용불안 변수의 경우, 빈곤진입 경험에 있어서는 네 가지 타입이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빈곤탈출에 있어서는 unstable type의 비중이 가장 낮아 고용이 불안정 할 경우 빈곤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 같은 결과는 빈곤진입률에서도 나타났는데, unstable type의 빈곤진입률은 11.3%로 stable type의 7배를 넘는 높은 수준이었다. 직업 종류에 있어서는 빈곤진입과 빈곤탈출을 경험한 청년층의 다수가 비취업자였으며, 관리자·전문가임에도 빈곤에 진입한 경우도 사무직이나 단순노무·농어업과 비슷한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관리자·전문가의 경우에는 2008년 빈곤에 놓여있던 청년이 2009년에는 모두 빈곤을 탈출한 것으로 나타나 직종이 빈곤탈출에 미치는 영향을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

3) 빈곤탈출 및 빈곤진입 요인에 관한 분석

청년 근로빈곤층의 빈곤탈출과 청년 비빈곤 근로능력자의 빈곤진입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공통적으로 성, 연령, 교육수준, 가구내지위, 혼인상태, 가구원 수 변화, 가구내 취업자 수 변화, 소득변화, 빈곤경험 등의 변수를 투입했다. 청년층의 고용불안정이 빈곤진입과 빈곤탈출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일자리의 상태와 수준을 나타내는 고용형태, 고용불안, 직업변수를 각각 독립변수로 투입해 고용형태 모델, 고용불안 모델, 직업모델로 나누어 분석을 시행했다.

(1) 청년 근로빈곤층의 빈곤탈출 결정요인 분석

청년 근로빈곤층의 빈곤탈출 결정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종속변수로 빈곤탈출(1)과 빈곤지속(0)을 적용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아래 <표 8>은 빈곤탈출 결정요인 분석 결과이다. 세 모형 모두 모형 적합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고용형태 모델에서는 교육수준, 건강상태, 가구지위, 혼인상태, 가구원 수 변화, 취업자 수 변화, 공적이전소득 변화, 빈곤경험 여부, 고용형태 변수가 청년 근로빈곤층의 빈곤탈출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를 통해 빈곤탈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던 성별, 연령변수는 청년 근로빈곤층의 빈곤탈출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육수준의 경우 전문대 이상의 고학력인 청년 근로빈곤층에 비해 고졸인 청년이 빈곤을 탈출할 odds는 60.7% 낮았으며, 고졸 미만의 저학력자의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가구지위의 경우 가구주인 경우에 비해 자녀인 경우 빈곤에서 탈출할 odds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5.389배). 이는 특정 시점의 빈곤상태를 보면 자녀인 경우 가구주나 배우자에 비해 빈곤율이 높지만, 빈곤이행이라는 빈곤의 동태를 살펴보면 자녀인 경우 빈곤을 예방할 수 있으며, 성인으로 이행해야 할 청년이 부모의 경제수준에 의존해 빈곤에서 탈출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¹³⁾ 이는 청년층의 빈곤이행이 청년이 속한 부모가구의 경제수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주로 확인하고자 하는 변수인 고용형태는 정규직에 비해 비취업자가 빈곤을 탈출할 odds가 각각 84.6% 낮은 것으로 나타나 고용형태가 안정적인 정규직이 비취업자에 비해 빈곤을 탈출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정규직의 경우도 정규직에 비해 빈곤을 탈출할 odds가 37.7%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고용불안모델에서 2008년과 2009년 사이의 고용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고용불안 변수는 2년 연속 취업상태를 유지한 stable type에 비해 2년 연속 비취업자인 trap type의 빈곤을 탈출할 odds는 83.3% 낮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bridge type과 unstable type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직업모델에서는 관리자·전문가(53.9배), 사무직(7.8배), 기능·기계직(32.9배)이 비취업자에 비해 빈곤을 탈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사무직이 기능·기계직보다 빈곤을 탈출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이는 같은 직종 안에서의 차이를 반영하는 근로연수, 직장규모,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등의 고용형태가 반영되지 못 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13) 가구지위에 혼인상태를 반영하여 추가로 분석한 결과('기혼, 이혼/사별, 미혼'과 '가구주, 배우자, 자녀' 변수를 하나의 변수로 결합), 기혼자녀인 경우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자녀는 기혼가구주에 비해 빈곤에서 탈출할 odds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자녀로 남을 경우 빈곤할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기본분석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표 8〉 청년 근로빈곤층의 빈곤탈출 결정요인에 대한 로지스틱 분석 결과

| 변수(기준) | 고용형태 모델 | | 고용불안 모델 | | 직업 모델 | |
|-------------------|-----------------|--------|-----------------|--------|-----------------|--------|
| | B(S.E.) | Exp(B) | B(S.E.) | Exp(B) | B(S.E.) | Exp(B) |
| 성(남) | 0.596(0.531) | 1.815 | 0.595(0.533) | 1.813 | 0.817(0.573) | 2.263 |
| 연령(24세이하) | | | | | | |
| 29세이하 | -0.287(0.593) | 0.750 | -0.281(0.604) | 0.755 | -0.261(0.650) | 0.771 |
| 34세이하 | 0.053(0.681) | 1.055 | 0.031(0.693) | 1.031 | 0.140(0.733) | 1.151 |
| 교육수준(고학력) | | | | | | |
| 저학력 | -2.258(0.900) | 0.105 | -2.247(0.908)* | 0.106 | -1.710(0.909)# | 0.181 |
| 고졸 | -1.189(0.455)** | 0.305 | -1.211(0.454)** | 0.298 | -0.996(0.479)* | 0.369 |
| 건강상태 | -0.793(0.317) | 0.453 | -0.799(0.317)* | 0.450 | -0.859(0.325)** | 0.424 |
| 가구지위(가구주) | | | | | | |
| 배우자 | -0.673(0.964) | 0.510 | -0.750(0.945) | 0.472 | -1.129(0.966) | 0.323 |
| 자녀형제 | 1.684(0.635)** | 5.389 | 1.772(0.651)** | 5.881 | 1.466(0.674)* | 4.331 |
| 혼인상태(기혼) | -2.216(0.893)* | 0.109 | -2.496(0.847)** | 0.082 | -2.471(0.873)** | 0.084 |
| 가구원수변화 | -1.003(0.358)** | 0.367 | -0.897(0.383)* | 0.408 | -1.009(0.421)* | 0.364 |
| 취업자수변화 | 0.841(0.335)* | 2.318 | 0.668(0.380)# | 1.950 | 0.818(0.354)* | 2.267 |
| 소득 | | | | | | |
| 재산소득변화 | 0.000(0.002) | 1.000 | 0.001(0.002) | 1.001 | 0.002(0.003) | 1.002 |
| 사적이전소득변화 | 0.000(0.000) | 1.000 | 0.000(0.000) | 1.000 | 0.000(0.000) | 1.000 |
| 공적이전소득변화 | 0.002(0.001)* | 1.002 | 0.002(0.001)** | 1.002 | 0.002(0.001)* | 1.002 |
| 빈곤경험 | | | | | | |
| 빈곤경험 여부 | -1.000(0.423)* | 0.368 | -1.040(0.431)* | 0.354 | -0.742(0.439)# | 0.476 |
| 고용형태 | | | | | | |
| 정규직(기준) | | | | | | |
| 비정규직 | -0.473(0.867) | 0.623 | | | | |
| 비취업 | -1.868(0.816)* | 0.154 | | | | |
| 고용불안 | | | | | | |
| stable(기준) | | | | | | |
| unstable | | | -1.014(0.710) | 0.363 | | |
| bridge | | | -0.129(0.891) | 0.879 | | |
| trap | | | -1.792(0.611)** | 0.167 | | |
| 직업 | | | | | | |
| 비취업자(기준) | | | | | | |
| 관리직·전문가 | | | | | 3.988(2.151)# | 53.932 |
| 사무직 | | | | | 2.051(1.222)# | 7.774 |
| 서비스·판매 | | | | | 1.321(1.034) | 3.748 |
| 기능·기계 | | | | | 3.492(1.751)* | 32.854 |
| 단순노무·농어업 | | | | | 0.288(0.733) | 1.333 |
| constant | 4.740 | | 4.617 | | 3.004 | |
| chi-square | 79.704*** | | 80.921*** | | 88.387*** | |
| -2 Log likelihood | 155.255 | | 154.038 | | 144.094 | |

주: #는 10%, *는 5%, **는 1%, ***는 0.1% 내에서 각각 유의함을 나타냄

(2) 청년 비빈곤 근로능력자의 빈곤진입 결정요인 분석

청년 비빈곤 근로능력자가 빈곤에 진입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종속변수로 빈곤진입(1), 비빈곤지속(0)을 투입하였다(표 9 참조). 세 모형 모두 빈곤탈출 분석과 마찬가지로 모형 적합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고용형태 모델에서는 성별, 교육수준, 건강상태, 가구지위, 재산소득 변화, 빈곤경험 여부, 고용형태 변수가 청년 비빈곤 근로능력자의 빈곤진입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여성인 경우는 남성에 비해 빈곤에 진입할 odds가 2.261배 높아 빈곤탈출과는 달리 빈곤진입에 있어서는 성별차이가 확인되었다. 교육수준의 경우 고졸 미만의 저학력 청년이 빈곤에 진입할 odds는 고학력인 청년 근로빈곤층이 빈곤에 진입할 odds의 9.68배이며 고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지위의 경우 가구주에 비해 배우자인 청년 비빈곤 근로능력자가 빈곤에 진입할 odds는 79.7% 낮으며, 자녀인 경우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가구주인 경우에 비해 자녀인 경우 빈곤을 탈출할 가능성은 높지만 빈곤진입에 있어서는 그 영향이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청년 근로능력자가 비정규직일 경우 빈곤에 진입할 odds와 비취업자일 경우 빈곤에 진입할 odds는 정규직이 빈곤에 진입할 odds의 4.57배, 10.84배로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둘째, 고용불안 모델의 경우 다른 변수의 결과는 고용형태 모델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주목할 점은 고용불안 모델의 경우, 가구원 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빈곤 진입 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표 8>의 고용불안모델에서 가구원 수의 증가가 청년 근로빈곤층의 빈곤 탈출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 것과 상반된다. 가구원 수의 증가가 빈곤이행에 미치는 영향이 청년근로 빈곤층과 청년 비빈곤 근로능력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2008년과 2009년 사이의 고용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고용불안이 빈곤진입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았다. unstable type이 빈곤에 진입할 odds는 stable type에 높았으며(8.48배), bridge type은 5.01배, trap type은 5.79배 높았다. 주목할 점은 비취업에서 취업으로 이동한 경우에도 빈곤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는 고용상태가 안정적으로 변화했어도 취업을 계속 유지한 것보다는 여전히 빈곤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취업을 하더라도 비취업 상태에 있었던 경우에는 빈곤위험이 여전히 높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는 bridge type과 trap type은 stable type에 비해 빈곤진입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직업의 경우 비취업자에 비해 기능·기계직(83.4%), 사무직(78.1%), 서비스·판매(78.7%), 전문가(74.4%), 단순노무·농어업(64.8%) 순으로 빈곤에 진입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큰 차이는 아니지만 고용 수준이 더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사무직이 기능·기계직에 비해, 그리고 관리자·전문가가 서비스·판매나 기능·기계직에 비해 빈곤에 진입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이는 비빈곤 가구주 전체를 대상으로 빈곤진입 요인을 분석해 서비스 및 생산직이 사무직이나 전문가 보다 빈곤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고 확인한 김교성·반정호(2004:47)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이는 앞서 지적한 직업 내 차이 이외에 연구대상이 청년층에 한정되어 나타난 청년층만의 특성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전통적 이론이나 기존 연구에서 사무직이나 전문가는 판매직이나 생산직보다 일자리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청년층의 경우에는 근로연수가 짧아 직업 별 임금 격차가 크지 않거나, 최근 청년실업과 비정규직의 증대로 사무직이나 전문직에 종사한다고 해도 임금 수준이나 고용안정성이 생산직이나 판매직에 비해 현저히 높지 않기 때문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표 9> 청년 비빈곤 근로능력자의 빈곤진입 결정요인에 대한 로지스틱 분석 결과

| 변수(기준) | 고용형태 모델 | | 고용불안 모델 | | 직업 모델 | |
|------------------|-----------------|--------|-----------------|--------|------------------|--------|
| | B(S.E.) | Exp(B) | B(S.E.) | Exp(B) | B(S.E.) | Exp(B) |
| 성(남성) | 0.816(0.376)* | 2.261 | 0.809(0.376)* | 2.245 | 0.846(0.386)* | 2.331 |
| 연령(24세이하) | | | | | | |
| 29세이하 | 0.165(0.422) | 1.179 | 0.184(0.428) | 1.202 | 0.176(0.426) | 1.192 |
| 34세이하 | 0.516(0.516) | 1.675 | 0.608(0.529) | 1.836 | 0.590(0.525) | 1.804 |
| 인구 | | | | | | |
| 교육수준(고학력) | | | | | | |
| 저학력 | 2.269(0.632)*** | 9.675 | 2.298(0.669)** | 9.957 | 2.157(0.645)** | 8.642 |
| 고졸 | 0.344(0.348) | 1.411 | 0.327(0.354) | 1.387 | 0.359(0.366) | 1.432 |
| 건강상태 | 0.305(0.168)# | 1.356 | 0.317(0.172)# | 1.373 | 0.346(0.170)* | 1.413 |
| 가구지위(가구주) | | | | | | |
| 배우자 | -1.594(0.730)* | 0.203 | -1.534(0.737)* | 0.216 | -1.339(0.738)# | 0.262 |
| 자녀형제 | -0.682(0.481) | 0.506 | -0.892(0.510)# | 0.410 | -0.753(0.492) | 0.471 |
| 혼인상태(기혼) | 0.403(0.617) | 1.496 | 0.627(0.632) | 1.873 | 0.773(0.631) | 2.167 |
| 가구원수 변화 | -0.187(0.196) | 0.830 | -0.048(0.208) | 0.953 | 0.008(0.195) | 1.008 |
| 취업자수 변화 | -0.208(0.222) | 0.812 | -0.572(0.268)* | 0.565 | -0.766(0.215)*** | 0.465 |
| 소득 | | | | | | |
| 재산소득변화 | -0.001(0.000)# | 0.999 | -0.001(0.000)* | 0.999 | -0.001(0.000)# | 0.999 |
| 사적이전소득변화 | 0.000(0.000) | 1.000 | 0.000(0.000) | 1.000 | 0.000(0.000) | 1.000 |
| 공적이전소득변화 | -0.001(0.000) | 0.999 | 0.000(0.000) | 1.000 | -0.001(0.000) | 0.999 |
| 빈곤 | | | | | | |
| 경험 | | | | | | |
| 빈곤경험 여부 | 2.129(0.408)*** | 8.409 | 2.213(0.416)*** | 9.141 | 2.303(0.416)*** | 10.007 |
| 고용 | | | | | | |
| 형태 | | | | | | |
| 정규직(기준) | | | | | | |
| 비정규직 | 1.519(0.551)** | 4.568 | | | | |
| 비취업 | 2.383(0.581)*** | 10.838 | | | | |
| 고용 | | | | | | |
| 불안 | | | | | | |
| stable(기준) | -6.206(0.886) | 0.002 | | | | |
| unstable | | | 2.137(0.558)*** | 8.477 | | |
| bridge | | | 1.611(0.505)** | 5.007 | | |
| trap | | | 1.757(0.463)*** | 5.794 | | |
| 직업 | | | | | | |
| 비취업자(기준) | | | | | | |
| 관리자·전문가 | | | | | -1.364(0.499)** | 0.256 |
| 사무직 | | | | | -1.720(0.537)** | 0.179 |
| 서비스·판매 | | | | | -1.546(0.550)** | 0.213 |
| 기능·기계 | | | | | -1.925(0.877)* | 0.146 |
| 단순노무·농어업 | | | | | -1.044(0.600)# | 0.352 |
| constant | -6.206 | | -5.814 | | -4.233 | |
| chi-square | 96.668*** | | 102.019*** | | 91.385 | |
| -2Log likelihood | 372.925 | | 367.574 | | 378.159 | |

주: *는 1%, **는 5%, ***는 10% 내에서 각각 유의함을 나타냄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데이터의 제3차(2007년)~제5차(2009년)까지 총 3개 연도의 자료를 이용해

청년 근로능력자의 빈곤이행(빈곤탈출과 빈곤진입)을 확인하고, 2008년과 2009년 사이 청년층의 빈곤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빈곤연구에 있어서 청년층은 노인이나 아동처럼 빈곤취약계층으로 여겨지지 않아 왔다. 본 연구를 통해 청년층의 빈곤율은 비록 다른 빈곤취약계층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이들 역시 빈곤의 위협에 노출되어 빈곤의 진입과 탈출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년 근로능력자는 건강상태나 연령, 고용형태 등 여러 조건에서 다른 연령계층에 비해 빈곤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청년층 내부에 명백히 존재하는 빈곤층과 비빈곤층을 가르는 고용특성의 차이는 다수의 청년들을 경제적 곤란에 빠트리고 있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청년층은 반복빈곤의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으며, 30대 후반의 빈곤율 증가 양상이 두드러졌다. 또한 비정규직의 증대와 높은 실업률로 대변되는 청년층의 고용특성과 고용불안정이 청년층의 빈곤이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취업자는 정규직에 비해, 비취업을 지속하는 경우에 취업을 지속한 경우에 비해 빈곤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낮았다. 이에 더해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이, 취업을 지속한 경우에 비해 비취업을 지속하거나, 취업에서 비취업상태로 고용이 불안정한 경우 빈곤에 빠질 위험이 높았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고용연계 정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탈빈곤에 있어서는 취업 촉진을, 빈곤예방에 있어서는 취업지속과 더불어 고용안정성 확보가 중요함을 의미한다. 또한 2009년 현재 청년근로빈곤층의 경우, 비취업자 비율이 절반을 넘고, 정규직 비율은 비빈곤층의 1/4 수준에 그친다는 점에서 청년근로빈곤층에 대한 고용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를 통해 청년 근로빈곤층의 빈곤 양상과 그들의 빈곤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고용특성을 확인하였다. 향후 청년빈곤 완화를 위한 정책 대안에 있어서의 다음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첫째, 청년층의 높은 교육수준과 청년빈곤층과 청년비빈곤층 사이의 교육격차를 고려한 고용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청년 근로빈곤층의 교육수준은 전체 근로빈곤층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었으며, 빈곤층과 비빈곤층의 고학력자 비중의 차이가 기존 연구의 경우는 10%~20% 포인트 수준인 것에 비해 청년근로빈곤층과 비빈곤층의 고학력자 비중 차이는 38%포인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⁴⁾. 또한 교육수준은 청년층의 빈곤진입과 탈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는 고학력 시대에 교육수준이 낮은 청년층은 그만큼 경쟁에서 뒤처져 근로빈곤에 빠질 위험이 더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청년고졸자나 저학력층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더욱 빈곤에 취약할 수 있음을 고려해 이들의 인적자본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강화가 요구된다. 한편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력에 의한 임금격차를 줄여나가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

둘째, 청년 빈곤 예방을 위해서는 취업률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고용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 고용불안의 현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청년 근로능력자의 비취업자 비중이 매우 높았으며, 취업에서 비취업으로의 이동과 비취업의 지속이라는 고용상태가 빈곤탈출 가능성은 줄이고, 빈곤진입 가능성은 높이고 있었다. 즉, 비취업을 중심으로 한 고용상태의 변화가 청년근로

14) 기존 연구에서 근로빈곤층 중 고학력자의 비중은 30%를 넘지 않는다(이태진, 2003: 61; 노대명 외, 2007: 121; 김교성·최영, 2006: 129).

능력자가 빈곤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었다. 청년층의 비취업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이유다. 한편, 비취업에서 취업으로 이동했어도 비취업을 지속한 경우와 빈곤에 진입할 가능성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이는 비취업에서 벗어나는 것만으로 빈곤 위험이 사라지지 않음을 암시한다. 청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제공하는 일자리의 질에 대한 고려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청년층의 빈곤에 있어서 공적이전 소득의 영향을 제고해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빈곤정책들은 빈곤이행의 역동성이 큰 청년층을 포괄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 본 연구대상인 중위소득 60% 미만인 청년 근로빈곤층 중 기초보장급여를 받는 경우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78명 중 31명), 공적이전이 빈곤이행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했다. 이는 현재 각종 소득지원제도가 청년 근로능력자의 빈곤 특성을 반영하지 못함을 보여준다. 청년층은 취업과 비취업 사이의 고용상태 변화로 인한 일시적 경제적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으며, 반복빈곤의 특징을 보인다. 따라서 청년층이 일시적인 실업상태에 놓이거나, 직장이동으로 인한 근로소득 감소가 발생했을 때 이들이 빈곤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보험체계를 정비해 비정규직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 실업자나 신규구직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등 청년층에 대한 소득지원제도를 확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변화된 노동시장 구조를 고려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청년층의 직업별 분포를 살펴 보면 기능·기계(생산)직의 비중이 낮고 전문가와 사무직의 비중이 높았다. 그러나 빈곤진입 요인 분석 결과, 전문가와 사무직에 종사하는 것이 빈곤위험에서 벗어나게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정규직의 증가 등의 고용형태 분화로 단순히 어느 직업에 종사하느냐가 빈곤 여부를 결정하지 않음을 의미하며, 제조업에서 사무전문직이나 서비스직으로의 산업구조 변화가 청년층에게 보다 많은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청년층의 고용촉진에 있어서 일자리의 수준을 결정하는 고용지속성, 임금 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을 이용해 청년 근로능력자를 대상으로 청년층의 빈곤 양상을 확인하고, 고용형태에서의 비정규직과 비취업, 고용상태 변화에 있어서 취업에서 비취업으로의 이동과 비취업의 지속으로 표현되는 고용불안이 청년층의 빈곤위험을 높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빈곤이행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는 빈곤의 지속 기간을 고려하지 않았고, 청년층의 가구내 지위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청년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출생가구로부터의 독립이라는 변화가 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확인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패널원가구에서 독립해 신규가구로 분리된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연결 자료를 마련해 추가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청년빈곤과 고용변수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탐색적 연구의 차원에서 이루어 졌다. 본 연구를 토대로 청년 근로빈곤층의 빈곤요인을 보다 명확히 규명하는 후속연구가 수행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구인회. 2002. “빈곤층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빈곤이행: 경제위기 이후의 시기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48(1): 82-112.
- 금재호. 2006.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근로빈곤 실태에 관한 연구”. 『노동경제논집』 29(1): 41-73.
- 김경휘. 2008. “근로빈곤 가구 청소년의 사회진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19: 129-156.
- 김교성·반정호. 2004. “고용상태와 빈곤경험이 빈곤이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18: 31-54.
- 김교성·최영. 2006. “근로계층의 빈곤결정요인에 관한 다층분석”. 『한국사회복지학』 58(2): 118-141.
- 김문일·김태완·전지현. 2010. 『2010년도 빈곤통계연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미숙·배화옥. 2007. 『한국 아동빈곤율 수준과 아동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수정. 2010. “청년층의 빈곤과 이행의 곤란”. 『사회보장연구』 26(3): 49-72.
- 김은하. 2009. “근로빈곤층 여성의 빈곤탈출 결정요인: 인적자본, 가구특성, 노동시장 지위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6(3): 239-268.
- 남재량. 2006. “청년실업의 동태적 특성과 정책 시사점”. 『노동리뷰』 22-33.
- 남재량·이철인·전영준·우석진. 2010. 『청년층 노동시장 진입 및 정착 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노대명·황덕순·유덕영·이은혜·원일. 2007. 『근로빈곤층에 대한 국제비교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노대명·홍경준·최승아·전지현·박은영. 2009. 『근로빈곤층 지원정책 개편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문혜진. 2012. 『노동경력의 변화와 노동성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미간행).
- 박강우·홍승제. 2009. 『최근 고용여건 변화와 청년실업 해소방안』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 박성재·반정호. 2007. “청년층의 하향취업 원인과 노동시장 성과”. 『한국사회복지학』 23(4): 1-28.
- 반정호·김경희·김경휘. 2005. “청년취업자의 노동이동 및 고용형태 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7(3): 73-103.
- 반정호. 2010 a. “청년층 고용상황과 소득수준의 변화: 가구단위의 분석을 중심으로”. 『노동리뷰』 2010(3): 3-15.
- . 2010 b. “청년고용과 소득불평등(빈곤)”. 『노동리뷰』 2010(11): 53-64.
- 방하남·김기현. 2001. “변화와 세습: 한국 사회의 세대간 지위세습 및 성취구조”. 『한국사회학』 35(3): 1-30.
- 삼성경제연구소. 2010. 『청년실업의 경제적 파장과 근본 대책』. 삼성경제연구소.
- 석상훈. 2011. “저소득층의 빈곤이행과 빈곤지속”. 한국사회보장학회 춘계학술대회: 183-205
- 손혜경. 2009. “스웨덴 청년실업의 원인에 대한 토론과 대책”. 『국제노동브리프』 7(8): 68-75.
- 신현중·김희연. 2008. “수도권가구형태에 따른 아동빈곤가구 특성분석”. 『사회복지정책』 33: 449-476.
- 안주엽·홍서연. 2002. “청년층의 첫 일자리 진입: 경제위기 전후의 비교”. 『노동경제논집』 25(1): 47-74.
- 여유진·김수정·구인회·김계연. 2007. 『교육불평등과 빈곤의 대물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병희. 2002. “경제위기 전후 청년 일자리의 구조 변화”. 『노동정책연구』 2(4): 1-16.
- . 2010. “근로빈곤의 노동시장 요인과 빈곤 동학”. 『경제발전연구』 16(1). 93-116.

- 이병희·장지연·윤자영·성재민·안선영. 2010. 『우리나라의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 실태』. 한국노동연구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상호·이상현. 2010. “저출산·인구고령화의 원인에 관한 연구 : 결혼결정의 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동향자료. 한국은행.
- 이시균. 2010. “청년의 초기 노동시장 경험이 향후 고용에 미치는 효과”.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조사 심포지움 발표자료.
- 이태진. 2003. “근로빈곤층의 빈곤요인 분석”.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임세희. 2006. “빈곤탈출의 결정요인: 경제활동 특성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2(2): 253-277.
- 지은정. 2007. “근로빈곤층의 빈곤탈출 결정요인: 근로빈곤노동시장의 경로제약성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9(3): 147-174.
- 최옥금. 2007. “노인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패널자료를 활용한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59(1): 5-25.
- _____. 2008. 『근로빈곤층의 직업 경력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학위 논문(미간행).
- 최현수·류연규. 2003. “우리나라의 노인빈곤 동향 및 빈곤구성에 대한 연구”. 『한국노년학』 23(3): 143-160.
- 홍경준. 2005. “근로빈곤층에 대한 탐색적 연구: 개념정의와 실태파악”. 『한국사회복지학』 57(2): 119-142.
- Aassve, A., M. Davia, M. Iacovou, and Mencarini, L. 2005. “Poverty and the Transition to Adulthood: risky situations and risky events.” *ISER Working Paper Series* 23.
- Aassve, A., M. Iacovou, and Mencarini, L. 2006. “Youth Poverty and Transition to Adulthood in Europe.” *Demographic Research* 15(2): 21-50.
- Berg, G. J., G. A. Lomwel and Ours, J. 1998. “Unemployment Dynamics and Age.” *Tinbergen Institute Discussion Paper* TI 98-116.
- Fahmy, E. 2002. “Youth,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Townsend Centre for International Poverty, University of Bristol, Research Paper 27.
- Fussell, E., and F. Fustenberg. 2008. “The Transition to Adulthood During the 20th Century: Race, Nativity and Gender.” in the *Frontier of Adulthood*, edited by R. A. Settersten Jr., Frank F. Furstenberg and R. G. Rumbaut,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Iacovou, M., and R. Berthoud, 2001. “Young People’s Lives: A Map of Europe.” Colchester: University of Essex, Institute for Social and Economic Research.
- Kangas, O., and J. Palme. 2000. “Does Social Policy Matter? Poverty Cycles in OECD countries.” *International Journal of Health Services Planning Administration Evaluation* 30(2): 335-352.
- Pavis, S., S. Platt, and Hubbard, G. 2000. “Young People in Scotland: Pathways to Social Inclusion and Exclusion.” York: Joseph Rowntree Foundation.
- Smeeding, T. M., and K. R. Phillips, 2002. “Cross-National Differences in Employment and Economic Sufficiency.” *Annals of American Association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580: 103-133.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Workable Youth's Poverty Transition -Focused on Employment Stability and Employment Status-

Byun, Geum-Su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how employment status changes affects poverty transition of workable youth using 3years panel data from KoWePS(Korea Welfare Panel Study, 2007-2009). Findings and implications of this study as follows. First, although relative poverty rate of aged 18-34 is lower than other age groups, significant amount of youth experienced poverty once in 2007-2009(14.59%). This means that there are some of youth suffering for poverty and the aspect of youth poverty is very dynamic. Second, much of workable poor of youth had high level of education(45.9% in 2009) and they were unemployed or inactive in labor market(55.3% in 2009). These findings consistent with previous studies of youth poverty or youth employment. Third, workable youth who had changed employment status from employed to unemployed or inactive in labor market were likely to enter poverty and less likely to exit from poverty. Moreover youth who were non-standard employed had more possibility to be poor and less possibility to be not poor. These show that employment instability makes youth vulnerable to economic hardship, poverty.

The result of this study suggest that anti-poverty programs which are related with the work-related programs and active labor market policy, should consider workable youth who have high level of human capital comparing other ordinary working poor. Because of much of youth are not poor in fixed time point, they can't be supported from existing social assistance program, like National Basic Livelihood Protection Program. As youth who experienced poverty in changing time need social support to prevent long-term poverty, government should contemplate adopting assistance program for workable poor youth.

Key words : youth poverty, working poor, employment unstability, poverty transition, employment status transition

[논문 접수일 : 12. 05. 25, 심사일 : 12. 06. 11, 게재 확정일 : 12. 06. 29]